

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의안 번호	9-60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·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할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「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함.

☐ 법적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개요

- 위촉인원 : 4명
- 위촉기간 : 2025. 1. 1. ~ 2028. 12. 31. (4년)
- 주요기능 : 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련 조사·처리
- 근무형태 : 주 1~3회 범위 내 위원회 협의 조정
- 활동비 지원 :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액의 2분의 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
☐ 추진경과 및 계획

-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: 2019.11.
- 2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: 2022. 4.
- 3명 (임기 : 2022. 7. 1. ~ 2024. 6. 30.)
-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: 2024. 4.
- 「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시민고충처리위원 모집 공고 : 2024. 4. 3. ~ 4. 12. / 12명 지원

-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 : 2024. 5. 1.
- 위촉 동의안 부결(제290회 정례회) : 2024. 6. 28.
- 시민고충처리위원 모집 공고(2차) : 2024. 7. 3. ~ 7. 12. / 18명 지원
-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 : 2024. 7. 30.
- 위촉 동의안 부결(제292회 임시회) : 2024. 9. 12.
- 시민고충처리위원 모집 공고(3차) : 2024. 10. 10. ~ 10. 22. / 17명 지원
- 위원 추천위원회 심사 : 2024. 10. 29.
- ※ 서류 지원자 중 12명 (일반분야 9명, 전문분야 3명) 실제 면접 참여
 - 면접 심사 결과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대상자 선정
 - : 4명 (일반분야 2명, 전문분야 2명)
-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: 2024. 10. 30. ~ 10. 31. / 이상 없음
- 의회 동의 후 위촉 : 2024. 12. 31. 까지

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

분야	자격요건	대상자	자격 및 주요 경력	
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•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	강형석 (63년생)	4급 이상 공무원 경력	전)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현)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민감사관
		박문수 (59년생)	4급 이상 공무원 경력	전) 서울시 기획예산실 전)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
전문 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•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	김재현 (92년생)	변호사	전) 서울경찰청 경위 현) 법무법인 와이케이
전문 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사·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	윤해식 (72년생)	건축사	전)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현) 은평구청 건축과

※ 전문B(세무사·회계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) 분야는 지원자(회계사) 면접 불참으로 미선정

☐ 방침결정문 : 【붙임 2】

【붙임 1】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32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
2.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3.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4.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6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7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8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
9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

제33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)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.

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3.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4.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5.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
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

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
□ 「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·처리
2. 다수인민원, 공공갈등 민원,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, 조정, 시정권고, 의견표명,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
3.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, 조정 등 처리
4.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5. 시장 및 안산시의회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위임·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6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7.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
8.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·외 기구·기관들과의 교류·협력
9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되,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
-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시장은 시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
제9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정당의 당원

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.

제10조(겸직 금지)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1. 국회의원, 지방의회 의원
2. 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·직원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